

# environment NEWS



## 국내소식

### 수돗물 관리기준 더욱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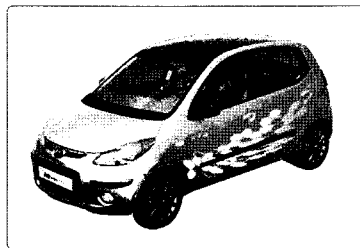


디브로모아세탁에시드와 브롬산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되는 등 수돗물 오염원인 중의 하나인 소독부산물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9년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수돗물 중 검출빈도가 높은 디브로모아세탁에시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하고, 오존처리 소독부산물인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먹는 해양심층수 및 먹는샘물에 이어 음용 지하수에 까지 확대·적용한다.

한편,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과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을 0.5NTU에서 1.0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로 현실화된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는 데도 탁도 수질기준이 지하수 수질기준(1.0 NTU)이 아닌 수돗물 수질기준(0.5 NTU)을 적용 받아왔다.

또한, 브롬산염,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등 3개 소독부산물을 수돗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노로바이러스를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 지정도 '10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 '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르면 8월에 전기차 다닌다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국내 최초로 전기자동차의 일반도로 시범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한국환경공단,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삼성전기, 롯데마트 등 제작사 및 충전인프라 관련 10개 기업대표들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EVE PROJECT = Electric Vehicle Evaluation PROJECT)」협약식을 개최하고, 전기자동차 운행에 위한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참여기업(10개) :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SB리모티브, LG화학, SK에너지, 삼성전기, LS전선, GS칼텍스, 롯데마트, LS산전

환경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기자동차 8대('10년 현대 i10 4대, '11년 르노삼성 SM3 4대)와 충전시설 16대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성능평가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보급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고, 충전방식별 충전효율, 적정 충전시설 규모, 비용편익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및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충전시설 지원기준 등을 설정하여 '11년부터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실정에 맞는 전기차 운행체계가 마련되면 '14년까지 2천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함으로써 연간 CO<sub>2</sub>배출량 2,600톤의 감축과 에너지 수요 9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 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으로 결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업사 등 소규모 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발표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매년 대규모 사업장(1~3종)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해

# 환경뉴스

01

왔는데 공업사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대기정책 수립에 한계점이 있었다.

\* 1~3종 : 연간 80~1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4~5종 : 연간 10~2톤 미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료 조사는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환경조사요원 250여명이 2009년 1년간에 걸쳐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업사 등 29,823개 소규모 사업장 중 조사 가능한 28,2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업종, 굴뚝, 시설정보 및 연료사용량은 물론,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기초가 되는 전기 사용량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 전기 사용량 1kWh 당 436g 온실가스 발생

그간 공업사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원 자료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인 D/B와 자료 검증이 미흡하였으나, 이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자료 관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D/B화와 자료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조사에 참여한 환경조사요원은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분야에 취업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 “G-20 정상회의」 대비 화학물질 취급시설 합동점검」 실시

환경부는 4월 30일까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G-20 정상회의」 국내 개최(10. 11)가 확정된 가운데 지난 홍콩의 연산투척 사건(10. 1) 등 화학물질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염소, 질산암모늄 등 사고·테러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하여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기관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분야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행사장 주변에 “화학분석 특수차량”을 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주변의 화학물질의 탐지·분석 등의 관련 정보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테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합동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확인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시 직장인의 근무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배출량 최초로 산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사무직 직장인의 근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일 온실가스배출량과 감축잠재량을 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무직 직장인 1,0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패턴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사무직 직장인의 일일 근무활동을 분석한 결과, 평균 9시간 51분 근무하고 컴퓨터는 8시간 22분 동안 사용하며, 이중 1시간 52분 정도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직장인 중 25%가 야근을 하며, 20.4%는 식사 또는 회의시에 모니터를 끄지 않았고, 출·퇴근시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46.3%로 가장 많았다.

사무직 직장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근무활동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857kg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33.9%는 난방, 28.3%는 출·퇴근, 20.6%는 냉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실제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근무활동에서 줄일 수 있는 감축잠재량을 산정한 결과, 냉·난방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녹색생활 실천만으로 일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인 0.91kg/인·일을, 냉방기간에는 1.99kg, 난방기간에는 2.59kg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름철, 겨울철 공공장소의 평균 실내온도 : 25.1℃, 22.2℃(2008, 에너지시민연대)

근무활동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에너지 절약과 함께 온실가스배출량의 14%인 537kg/인·년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소나타(2,000cc)로 서울~대전(137km)을 10회 왕복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548kg)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상 생활속 활동과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 잠재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친환경운전(Eco-Driving), 연료소비량과 CO<sub>2</sub> 감축 효과, 실증적으로 입증

국립환경과학원은 친환경운전이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 도로주행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교통 소통이 원활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급가속을 줄이고 느긋하게 운전(가속을 자주 하지 않거나 가속을 급하게 하지 않음)하는 것이 연료소비량과 CO<sub>2</sub>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급가속 정도·

빈도를 20% 줄이면 CO<sub>2</sub> 3.5kg, 연료 1.3L(연료비 1,885원)가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0km 주행 기준) 이는 같은 평균 속도로 달리면서 가속 정도의 차이만을 비교한 것으로서, 느긋하게 운전한다고 해서 주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따라서 출발할 때는 “처음 5초 동안에 시속 20km까지 도달한다”는 기분으로 운전하고, 주행 중에는 가급적 정속 운전이 권장되며, “급해서 빨리 가려면 급가속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바꾸면 경제운전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 등 정체가 빈번한 곳을 주행할 때는 정체 시간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CO<sub>2</sub> 5kg, 연료 2L(연료비 2,900원)를 절약할 수 있으며(10km 주행 기준), 또한 원활한 교통 소통 덕분에 운전 시간을 약 1시간 30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정체시간의 통행량 분산을 통한 원활한 도심 교통 소통이 기대된다.

## 아까운 중고가구, 재활용센터를 통해 이웃으로!



환경부는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목재류('08년 약 50만톤) 중 간단한 수리·수선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류(전체의 약 70% 수준)를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중고가구 무상지원 사업은 '10년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34개 시·군·구, 47개 재활용센터(서울 29, 인천 4, 경기 14)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재활용센터는 참여 지자체를 통해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등 지원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수거하여 수리·수선을 거친 중고 가구류(생활가전 포함) 등 희망하는 보유 물품을 무상으로 직접 운송·설치해 주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열악한 재활용센터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가구류 등 중고물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위탁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재활용산업 육성 용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센터와 환경부·지자체가 함께하는 “중고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뉴스

02

##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방류수수질기준 대폭강화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조건 완화 및 맨홀과 물받이 기자재의 재질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10. 2. 26자로 개정·공포하였다.

이번에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은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인자인 영양물질 총인(T-P)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10배(2mg/L→0.2mg/L), BOD(10→5mg/L) 및 COD(40→20mg/L)는 각각 2배로 강화되며,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며(3월 중 고시에정),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2. 1. 1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 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떼다



환경부와 문화부는 공동으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고자 자원별 유형을 고려하여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였다.

모델사업 대상지는 자연의 보전가치, 관광자원의 매력도, 지역주민 참여도 등 6개 지표의 15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환경보전, 관광,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10. 2. 23)를 거쳐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 ① 생물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륙습지와 관련하여서는 약 1억 4천만년 전에 생성되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우포늪이 있는 경남 창녕군이 선정됐다.
- ②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로 더욱 알려진 연안습지와 관련하여서는 갈대밭 및 너른 갯벌로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이 자리잡고 있는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③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며 잘 보존된 자연생태환경으로 국내외 관심이 많은 DMZ 관련하여서는 지구의 마지막 갈라파고스라 일컬어지며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와 안보관광 중심지이며 평화생명지대(PLZ : Peace Life Zone) 관광개발 예정지인 강원도 화천군이 선정됐다.

④ 겨울철새의 주요 월동지인 철새도래지 관련하여서는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 300여종 40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 동북아 최대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이 있는 충남 서산시가 선정됐다.

⑤ 다양한 식생과 친근한 여행지인 산·강 관련하여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교문화를 엿볼수 있는 소백산 자락길과 섬진강의 시원데미샘과 아름다운 산천을 걸으며 지역별 특성을 느낄 수 있는 고원마실길이 조성되고 있는 전북 진안군이 선정됐다.

⑥ 내륙지역과 다른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섬과 관련하여서는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거문오름이 선정됐다.

⑦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형을 관광자원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해안 관련하여서는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기능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구인 신두리



해안사구가 위치한 충남 태안군이 선정됐다.

- ⑧ 환경의 변화와 생태자원의 생성이 특별한 화석·동굴 관련하여 지표 운동과 지하수·석회수의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 백령동굴과 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이 흐르는 강원도 평창군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대상지의 생태자원의 보전,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10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유사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본보기가 되어 자원유형별 대표적인 모델마련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중견기업 육성 대토론회



“중견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중견기업 육성 대토론회가 지난 2월 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압축성장의 산물인 호리병형 산업구조 개선 ▲핵심산업의 부품소재 관련 원천기술 확보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 등 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갑수 KAIST 교수와 산업연구원의 조영삼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봉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병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규 코스닥협회장, 노강식 기은경제연구소장, 최영환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이관섭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등 중견기업 유관기관·단체가 나서서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날 대토론회는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개회사와 정장선 위원장의 환영사 등이 있었으며 윤용로 기업은행장,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봉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병규 코스닥협회장 등 중견기업 유관기관과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주관을 맡았던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미래 모습”이라면서 “정책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발하도록 함으로써 정체되었던 기업부문의 성장판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